

- ◇…요세 한참 심각히 대두되고 있는 북한의 식량난…◇
 - ◇…문제. 언론매체 보도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북한의…◇
 - ◇…식량난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놀라는 것은 북한동포…◇
 - ◇…들이 기아에 헤메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가 느끼는…◇
 - ◇…그 이상의 위기 상황이 아닌가 싶다. 최근 농촌경…◇
 - ◇…제연구원의 신승열, 김운근 연구원이 연구발표한…◇
 - ◇…『북한의 축산물 수급현황과 대북 축산업 지원방…◇
 - ◇…안』을 통해 북한의 축산업 실상에 대해 알아보기…◇
 - ◇…로 한다.
- 〈편집자주〉 …◇

최근 식량사정이 극도로 악화 돼 있는 북한의 내부사정은 어떤 형태로든 남북한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에 대비한 각 분야의 연구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북한의 농업분야 중에서도 축산부문의 정책들을 살펴보고 축산물의 생산소비 현황을 파악하고 앞으로의 북한의 축산물의 수급전망을 살펴 보았다. 또 식량난 해결을 위해 적·간접적으로 지원 및 협력 가능한 대안에 간략하게 언급, 향후 남북한 경제협력에 대비한 축산부문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를 제시코자 한다. 지금까지 북한에 대한 연구는 정치환경 내지는 군사적 평가에 치중해 온게 사실이다.

독일통일의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사회 각 부문에서의 통일에 대한 충격과 통일비용에 대한 막대한 부담은 우리에게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을 일깨워 주고 있다.

이같은 통일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그 응집된 힘을 통일조국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전환을 위해선 사회전반 뿐 아니라 산업전반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선행돼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어떠한 분야이든 북한에 대한 정확한 실상을 사전에 파악해 두는 것은 남북한간의 경제교류와 더 나아가 통일에 대비한 중요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북한은 지난 63년 이래 각종 통계를 거의 발표하지 않고 있으며 발표하는 경우에도 극히 제한적이거나 대외 선전용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신뢰성이 결여돼 있어 연구수행에 상당한 제약이 되고 있다. 이런점 때문에 본 연구를 위해 그동안 북한에서 농업부문에서 종사하던 귀순자들을 면담해 청취, 조사한 자료를 참고하지 않을 수 없었다.

북한의 축산정책 방향은 『축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국영축산과 협동농장을 기본으로 하고 여기에 개인 부업축산을 조화시켜 발전시킨다』는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해

피, 토지개혁 생산기반을 정비하고 국영농목장·협동농장 체제로 전환시키기 위해 농업과 축산을 병행하는 농업협동화 정책을 세웠다.

또한 축산장려를 위해 1961년부터 부업축산의 우월성을 인정하고 개인농가에 대해서도 가축사육을 적극 권장하기 시작했다. 개인농가의 축산은 전업보

산물 생산증대와 관련한 경영상의 제반 문제점 및 과업을 제기하는 동시에 축산분야 종사자들의 사기진작에 힘썼다. 또 지역간, 농장작업반간의 경쟁의식을 고취시켜 축산물 생산을 증대하기 위하여 83년 12월 농근맹중앙위원회에서 축산농정과 작업반에 모범칭호 수여 및 84년 1월 중앙인민위원회 정령으로

급의 원활화를 위해서는 비름, 동과, 호박 등 비곡물류의 사료용 작물재배 확대 및 관리를 철저히 하고, 비경작용 유휴지 활용강화, 방목지 및 풀산 등 자연먹이기지 조성을 제3차 7개년계획 기간인 87년 이후에 제시하였다.

즉 축산용 새 땅찾기 사업, 10만정보의 비름밭 조성 및 1정보당 2백여톤의 사료작물 생산목표 제시 등이다.

북한의 축산행정조직은 농촌관리 및 농업경영지도체계에 의하면 국무원 농업위원회 산하 협동농장지도총국, 국영농장관리총국, 과수총국, 양어총국, 가금총국 및 축산총국이 있다.

1965년 농업위원회 개편시 초식가축 중심의 축산총국과 가금류 중심의 가금총국으로 분류한 것이다.

축산총국에서는 종축장 중심으로 기술행정을, 가금총국에서는 종금장 중심으로 전문화된 기술행정을 수행하고 있다. 중앙단위와 도단위에서는 대규모 직영목장, 종축장, 사료공장, 수의방역소가 설치되어 있어 우량가축의 생산과 공급, 사양관리기술에 관한 시험·연구지도를 담당한다.

각 군에는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를 두고 공동축산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종축별로 전문화된 종축작업반을 편성하여 세분화된 경영을 하고 있다. 군경영위원회에는 축산과가 있고 과장, 기사장, 3~4명의 지도원이 있어 축산행정 및 축산기술을 보급하고 있다.

최하층 행정단위인 리에서는 협동농장관리위원회를 두고 여기에는 소규모 축산작업반이 있으며 작업반 밑에 축산분조를 조직하여 축산부문을 장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민들은 부업축산으로 돼지, 토끼, 닭, 오리 등 가축별로 분조를 나누어 지역 특성에 따라 축산전문작업반과 분조에 소속된다.

축산관련 연구체계를 살펴보면 농업과학원 산하에 축산연구소, 가축연구소, 사료학연구소, 가금연구소, 수의과학연구소 등 5개 연구소와 축산시험장, 종화종축장 및 농업관련 중심으로 12개 농업대학에 약 3만명의 학생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영목장과 종축목장에서는 기술개발에 관한 시험사업과 기술지도사업 및 우량가축의 증식과 공급을 담당하며 전문연구기관과 대학에서는 가축육종과 번식, 사양관리, 축산가공, 수의, 방역, 축산경영 등의 분야를 연구한다.

또 국영농장 및 협동농장 중심으로 현대화된 설비를 제공하고 우수한 종축을 생산, 분양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을 투입하는 등 필요한 기술지도도 단계별로 실시했다.

이외에도 종축체계의 확립 및 인공수정 등을 통한 가축번식장려, 축산시설과 사료 가공시설의 개량, 가축관리의 과학화 및 수의방역사업 등을 중요 과제로 제시하고 있으나 성과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혀진 것 이 없다.

북한의 축산물 수급현황

야 한다』고 명확하게 설정하고 있다.

이는 김일성 종합대학출판사에서 발간한 농업경제학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본 책자에선 축산업 발전은 『북한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또 축산업은 『인민들의 식생활을 개선, 식량을 절약하며 농업 부문의 발전을 촉진시킬 뿐 아니라 산간지대 농민생활 향상에 중요 한 의의를 가지고 경공업의 원료 원천을 확대하는데 기여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북한은 축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우선적으로 국영농목장들을 개편, 전문화하고 지역의 자연경제적 조건에 맞게 배치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풀이 많은 산간지대에는 소, 양을 비롯한 초식가축 사육을 주로 하되 돼지 등과 같은 잡식가축을 병행해 사육하고 평야지

다는 부업형태를 유지하도록 장려하였다.

장려사육제도는 평야지대와 산간지대로 구분하여 도입했다. 부업축산은 63년 이후 국영 축산 확장과 병행하여 계획 권장되었다. 평야지대의 농가는 각호당 돼지 2마리, 토끼 15마리, 닭 10마리 이상을 장려하고 산간지대 농가는 각호당 평야지 대와 같은 수의 돼지, 닭을 사육토록 하고 토끼는 30마리 이상을 사육할 것을 권장하였다.

이처럼 북한의 축산도 제1차 7개년계획(1961~67년)에 전환기를 맞아 60년 국영농목장 작업반들에 대한 독립채산제를 도입하여 축산물 생산을 장려하였다. 1961년 3월에는 국영농·목장의 신설, 확장에 주력할 것을 채택하였고 63년 9월에는 당중앙 제4기 7차전원회의 결정에 따라 국영농목장의 농산과 축산을 분리하여 전문화하는 한편 도시와 공업 중심지에 육류

『모범축산군 구역』 칭호를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축산물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각 행정단위, 협동농장 및 작업반, 각 농가 등에 일정수의 가축사육을 의무화할 것을 제5차 당대회에서 결의함으로써 가축사육이 장려제도에서 의무사항으로 전환되었다.

축정의 의무사육제도가 확립되면서 축산물 생산에 대한 구체적 목표가 제시되었는데 육류 4만톤, 빵류 30억개, 우유 6만 톤, 양털 2천5백톤 등이다. 이런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74년 연산 1만톤 능력의 평양돼지 공장을 비롯하여 5천 톤과 2천톤 능력의 돼지공장 등 주요도시와 노동지구에 대규모의 돼지공장 건설과 함께 이미 마련된 가금기지를 더욱 강화하였다.

오리공장, 상원젖소공장, 평안북도에 24개의 오리종금장을 건설함과 동시에 청진, 홍성 닭

국영 농목장 중심 생산량 증대 주력 61년이후 부업 축산 인정 개인사육 권장

대에서도 잡식가축과 초식가축 사육을 병행하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적 배치는 사료 이용가능성에 따른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이 경제의 전부문에 있어서 『자력갱생』, 즉 자급을 강조하고 있는데 축산부문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며 이를 위해 정책의 대부분이 생산량 증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전후 60년대 이전의 북한 축산은 소규모 부업적 형태를 띠었다. 이런 점 때문에 북한은 구비조달, 축력의 이용이 주된 목적이던 유축농업단계를 탈

및 런생산 기지를 강화하고 가축별 종축장을 배치하였다.

그리고 중앙농업위원회에 가축총국과 가금총국을 신설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국영목장, 종축장 및 사료공장 등의 관리 운영을 전담하도록 하고 있다. 국영 및 협동농장 중심으로 현

대화된 설비를 제공하고, 우수한 종축을 생산, 분양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을 투입하는 등 필요한 기술지도도 단계별로 실시했다.

1980년 이후 도단위, 전국 지역규모의 축산부문 관련회의 또는 열성자대회를 개최하여 축

공장과 광포, 용자 오리공장을 확장하고 진천, 신의주, 청진, 송원에 배합사료공장과 현대적인 돼지공장에 사료분쇄장을 조성하였다. 각 협동농장에는 작업반당 연간 고기 23톤, 흐당 1백kg 이상의 육류 생산운동을 전개하였다.

또 기존의 닭공장, 오리공장, 돼지공장 기지를 강화하고 공동축산장을 증설하는 한편, 부락 단위로 축산작업반, 축산분조를 조직하여 대중적 운동으로 의무사육을 강화하였다.

북한은 또 축산물 생산과 관련, 가장 시급한 문제인 사료공

지, 보완한 후 2단계로 경제·신용사업의 자회사를 추진토록 하고 있으며 제2안은 1단계로 경제사업을 먼저 자회사화 한데 이어 2단계로 신용사업을 자회사화 하도록 돼 있다.

또 제3안은 우선 경제·신용사업 부문에 전문경영인(CEO)체제를 도입, 부회장에 전문 경영 협법과 조세감면 규제법, 지방세 인을 갖혀 경영권과 대표권을 갖도록 한 후 2단계로 경제·신, 립 및 운영에 따른 각종 세금을

용사업을 완전 자회사화 하는 감면해주는 등 보완대책을 먼저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경제·신용사업 부문이 떨어져 나가 자회사로 완전 독립하게 되면 협동조합중앙회는 회원조합 趙臺(趙臺)에 넘겨 각계의 의견을 대한 지도사업만이 남게되며 충분히 수렴한 후 최종안을 확정키로 했다.

기획단은 그러나 각 협동조합 중앙회의 여건이 서로 다른 점을 감안하고 조직이 받게될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경제·신용사업의 자회사화는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의했다.

기획단은 아울러 농·수·축·임업 등 세법을 개정해 자회사 설립과 운영에 따른 각종 세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림부는 기획단의 건의 내용을 「농정발전기획단」(단장 趙臺)에 넘겨 각계의 의견을 대한 지도사업만이 남게되며 충분히 수렴한 후 최종안을 확정키로 했다.

농·축협 신용·경제사업 단계적 분리해야 협동조합발전기획단, 경영체제 개혁안 건의

농·수·축·임협 등 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경제 및 신용사업 부문을 떼내 자회사로 만드는 등 현재의 경영체제를 대폭 개편해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됐다.

협동조합 개혁조치의 일환으로 대통령령에 따라 설치된 「협동조합발전기획단」(단장 손정수 농림부 농정기획실의관)은 세계 무역기구(WTO) 출범과 금융의 국제화·개방화, 농수축산물 새 장개방 등 경영여건의 급변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경제와 신용사업을 중앙회에서 분리해 자회사로 만들어야 한다고 정부에

공식 전의했다.

기획단은 지난 6월말까지 활동을 끝내면서 내놓은 「협동조합발전방안」을 통해 농·수·축·임협중央회로부터 신용·경제사업을 분리, 자회사화하고 중앙회는 지주(持株)회사의 역할만을 수행토록 함으로써 경영을 효율화, 협동조합의 자립경영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기획단은 협동조합중앙회 경제·신용사업 자회사의 방향으로 3개 대안을 제시했다.

제1안은 우선 1단계로 중앙 회의 현행 독립사업부제를 유